

文 대통령 평양에서 사흘...협상에 무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간 머문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쇼보다 협상'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다.

평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서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했다. 선발대에는 권혁기 춘추관장, 그리고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산책'을 연출했던 탁현민 청와대 선인행정관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북측과

평양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한 차례 진행한 다음 문 대통령의 방북 경로와 방북단 규모, 생중계 여부 등 이번 정상회담 일정의 클 줄기만 발표했다. 세부적인 동선에 대한 협의는 탁 선인행정관을 비롯한 선발대가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2000년 6월 김 대통령 방북 당시 김 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순안공원에서 김 대통령을 영접했다. 한반도 분단 이래 첫 남북 정상회담 최고의 이벤트로 평가되는 순간이다. 당시 전용기에서 내린 김 대통령은 순안공원에서 의장대를 사열했다. 2007년 10월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던 노 대통령은 4·25

내일 취임 후 첫 평양 방문...첫 만남 생중계
과거北 '금수산' 참배 요구에 어려움 겪기도
"무리하게 체제 선전적 일정 강요치 않을 것"

문화회관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사열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순안공원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린다. 이후 무게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통과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후의 일정은 다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김 대통령의 방북 둘째 날 백화원 영빈관 회의실에서 첫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개최되는 터라 첫날에 곧바로 회담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회담 백화원 영빈관, 만수대의사당, 노동당 본부청사 등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수립일(9·9절) 70주년을 계기로 5년 만에 집단체조 공연을 부활시켰다. 김 위원장은 9·9절 사절단과 함께 5·1경 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 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공연이 평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공연 영

상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모습이 들어갔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 대통령이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북이 간 비핵화 논의가 공전되면서 남남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터라 '이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일정을 최소화할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김 대통령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요구했으나, 국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남측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하면서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당시 남측은 '우상화' 논란이 커질 경우 정상회담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화해·협력 동력도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를 김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측은) 무리하게 이념적이거나 체제 선전적인 일정은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화해·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평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체제 우상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는 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0석→10석'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국회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 수가 14명인 평화당은 독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는 해의 사례와 비교할 때 과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독일 하원은 의원정수 992인의 8%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



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협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황주홍 의 김광수·김종희·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유주·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전정배·최경환(이상 평화당)·박주현·이찬열·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洪 '고생하고 있다' 발언에 김병준 "덕담으로 이해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고생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주 좋은 덕담을 해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응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의응답 중 홍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내 혁신은 내일부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귀국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부터 취재를 해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전 대표가

내년 정권대화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존재감 상기를 위해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김 비대위원장과 대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은 홍 전 대표에 대해 "지금도 평당원 중에 한분이다. 별로 관심을 안두고 있다"고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단 김 비대위원장은 당의 가치를 바꾸는 비대위원장을 지원하며 당 체질을 예고하고 있어 홍 전 대표 등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뉴스-

美전문가들 "北종전선언 집착 속내는...주한미군 철수·핵우산 제거"

"유엔군사령부·미군 주둔 정당성 의문 제기될 것"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미 군사전문가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남북 양국만으로도 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참여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의 한국 주둔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남북 양국 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것은 미군이 더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종전선언으로 한국의 상황이 더 나

아질 것으로 보고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종이지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한국을 북한의 공격에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속내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코사 소장은 이어 남북이 공식적인 비공식적이든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정은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정전협정 참여국(미국, 중국, 북한)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남북이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평화협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